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871호
2022. 8. 29

정책동향

■ 디지털 기술 기반의 건축현장 공사감리 효율화 가속 필요

시장동향

■ 6월 갱신 비율 50% 초과, 지난해 대비 20%p 증가

■ 50년 만의 최대 위기,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 ↑

산업정보

■ 지난 10년간 가장 저조... 韓, 인프라 지원 실적 3.2억 달러

건설논단

■ 쪼그라든 K건설 '원 팀'만이 살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디지털 기술 기반의 건축현장 공사감리 효율화 가속 필요

- 감리 업무의 효율화 및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기술 보완이 재해율 감소 유도 -

■ 건축공사감리 강화 지속, 하지만 건설업 재해자 중 약 60%는 건축현장에서 발생¹⁾

-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재해자는 매년 평균적으로 2만 5,000건 수준이고, 건축현장(주거 및 비주거 포함)은 토목, 플랜트 등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임. 건축현장 공사감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임.
 - 공사감리 관련 제도 및 기준 적용이 실행되고 있지만, 건축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비건축 현장보다 여전히 높아 안전사고 예방 등의 공사감리업무 성과는 정체되어 있고 개선을 위한 세부 적용 기준 보완이 강조되고 있음.
- 주거 및 비주거 건축물을 포함한 건축사업 시장 규모는 국내건설업의 약 72%²⁾이고, 재해율은 비건축 사업에 1.8배 수준으로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공사감리체계 개선이 중요함.
 - 국내 건설산업의 내수시장에서 건축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여전히 높지만, 디지털 기술 도입에 의한 생산성 혁신과 아울러 안전성 향상 속도는 더딘 실정임.
 - 공사감리업무 수행의 효율화를 위한 기술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성과물이 건축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위한 제도적 방안 수립이 필요함.

■ 디지털 기술 기반의 공사감리 경쟁력 강화, 제도적 보완 대책으로 성과 기대

- 건축현장 공사감리 대상 사업 중 민간사업 부문은 전체 규모의 약 96% 수준³⁾으로, 공사감리 업무의 효율화 및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보완이 건설업의 재해율 감소에 성과를 유도할 수 있음.
 - 2021년 건축 인허가 통계를 살펴보면, 민간 건축 시장에서 주거용은 35.5%, 비주거용은 64.5% 수준으로 대부분 건축현장의 공사감리는 「건축법」의 업무세부기준을 적용받음.
- 특히, 현행 건축현장 공사감리 제도 및 기준은 「건축법」, 「주택법」, 「건축사법」 등 사업마

1) 현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공동기관으로 수행하고 있는 '실시간 빅데이터 기반 작업자별 맞춤형 건설재해 예방시스템 개발'의 분석 내용 일부를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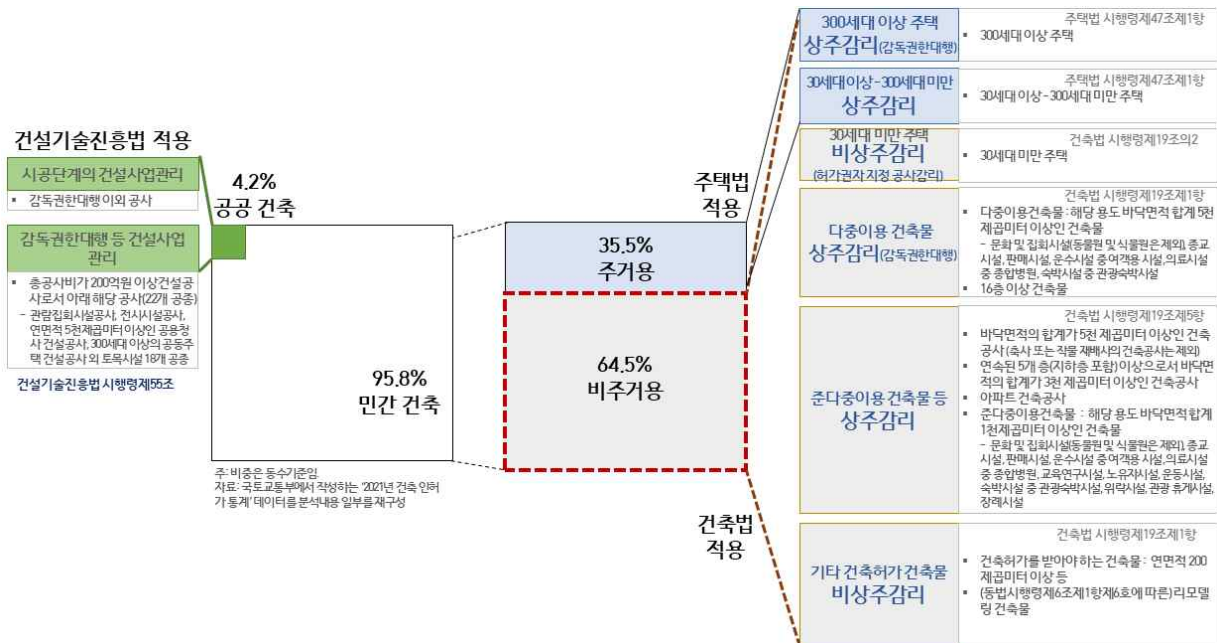
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2년 하반기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 자료 참조.

3)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하는 2021년 건축 인허가 통계 데이터 분석 결과를 일부 인용함.

다 적용 범위가 복잡하고 중복 적용으로 관련 법령의 체계화는 공사감리 업무의 디지털화를 가속할 수 있음(<그림 1> 참조).

- 건축현장 공사감리는 다수의 관련 법령에서 제시된 기준을 준용하면서 중복 및 혼선을 야기할 수 있음. 제도의 효율화는 향후 건축현장 공사감리의 체계 개선으로 생산성과 안전성 향상에 중요한 과업임.

<그림 1> 현행 제도 및 기준 기반 건축현장 공사감리 대상 사업 및 적용 범위



주 : 현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건축현장 공사감리 KPI 관리체계 구축 연구' 내용 일부를 재구성함.

■ 관련 제도 및 기준의 중장기적 현실화, 건축현장 공사감리 역량 강화의 시급성

- 건축현장에 디지털 기술 보급이 가속되면서 공사감리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제도 개선과 실행 기준의 구체적인 수립이 필수적임.
 - 현행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화 방안'으로 건축현장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공사감리 역량 강화의 실행 방안과 연계된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 성과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
- 정부의 공사감리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과 함께 민간의 자체적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디지털 공사감리 기술의 의무적 적용보다 역량 강화를 위해 선제적 도입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요함.
 - 건축현장 공사감리의 모호한 업무 보완, 디지털 기술 적용 환경 구축, 설계(BIM 등) 단계와 연계성 강화 등은 디지털 전환을 가속할 것으로 기대됨.

유위성(연구위원 · wsyoo@cerik.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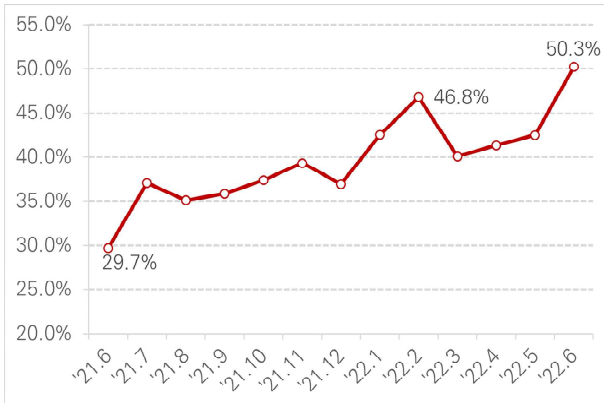
6월 갱신 비율 50% 초과, 지난해 대비 20%p 증가

- 서울 아파트 임대차 갱신 계약 50.3%,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은 62.9% -

■ 실거래가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갱신 계약 비율 50.3%로 최고 비율 경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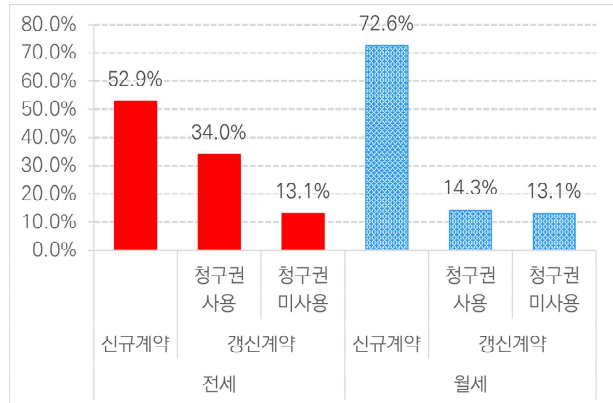
- 2021년 6월의 29.7% 이후 우상향하던 전·월세 갱신 계약 비율, 1년 만에 50.3%로 증가
 - 연구기간⁴⁾ 중 전·월세 계약 18만 5,481건 중 기존의 계약을 갱신한 계약은 7만 3,352건으로 나타나 평균 39.5%의 갱신 비율을 나타냄.
 - 갱신 계약은 최초 자료가 공개된 2021년 6월 29.7%로 가장 낮은 기록을 보인 이후 점차 증가해 1년 만에 시장에 무사히 안착한 것으로 분석됨.
- 전세(52.9%)와 월세(72.6%)의 신규 계약 비율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의 격차 발생
 - 연구기간 동안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중 신규 계약은 52.9%에 머물렀던 반면, 월세 계약 중 신규 계약이 72.6%를 차지해 전·월세 간 신규 계약 비율에 격차가 발생함.
 - 계약갱신청구권 미사용 비율은 각각 13.1% 수준으로 동일하게 집계되었기에 갱신계약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에서 신규 계약 비율 만큼의 차이가 두드러짐.
 - 올해 상반기 들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아파트의 월세 거래가 많아졌는데 이 중 많은 부분이 비교적 가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계약으로 추정됨.

<그림 1>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갱신 계약 비율 추이



자료 : 국토교통부(2022).

<그림 2> 전·월세별 갱신 계약 비율



주 : 2021년 6월~2022년 6월 체결된 거래를 기준으로 산정함.
자료 : 국토교통부(2022).

4) 본 고의 연구 기간은 '21년 6월~'22년 6월로 결정함. 7월 거래가 신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월까지로 자료를 제한한 것은 원고 작성일(2022. 8. 24.) 기준으로 7월 데이터는 거래 신고 가능 기간이 잔존해 자료 안정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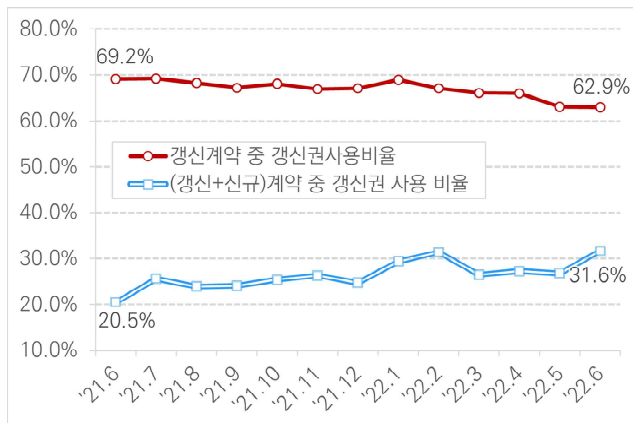
■ 반면 갱신 계약 중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은 62.9%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

- 2021년 6월 70%에 근접했던 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은 2022년 6월 기준 62.9%를 기록
 -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권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래가 27.1% 수준에 달하는 것임.
 - 반면 신규 거래 비율이 감소하면서, 전체 비율을 산출하면 올해 6월이 31.6%로 가장 높음.

■ 지역별로는 전세와 월세의 갱신 비율에 지역별 차이가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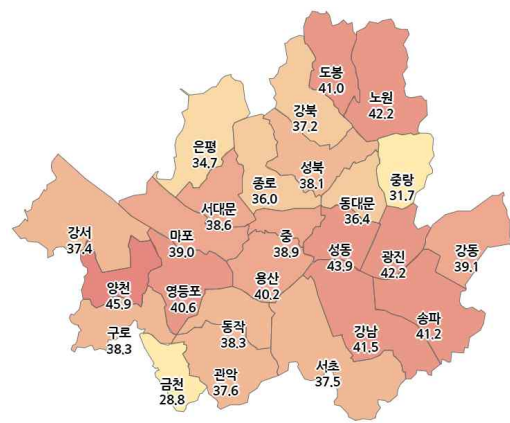
- 전세 갱신은 양천, 용산, 성동의 비율이, 월세 갱신은 성동, 구로, 양천의 비율이 높음.
 - 양천구의 경우 전세(52.4%)와 월세(32.3%)를 통틀어 갱신 비율이 높았고, 반대로 금천구는 전세(37.8%)와 월세(13.1%) 양 거래 유형에서 25개 구 중 가장 낮은 갱신 비율을 나타냄.
 - 서울시내 자치구 중 구로구는 전세 갱신 비율은 낮은 반면 월세 갱신율은 높은 편이었고 강동구와 용산구는 전세 갱신율은 높았지만 월세 갱신율은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3>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계약갱신청구권 활용 비율



자료 : 국토교통부(2022).

<그림 4> 시군구별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갱신 거래 비율 (%)



50년 만의 최대 위기,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 ↑

- ‘에너지 안보’, ‘합리적 가격’, ‘저탄소’의 중요성 강조 -

■ 세계 에너지 시스템, 1970년대 에너지 쇼크 이후 최대 불확실성 및 위기 직면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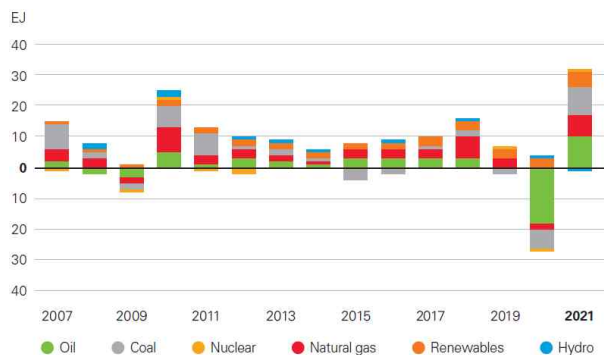
-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 급증,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부족과 그에 따른 가격 인상, 탄소 배출량 증가세 지속으로 인해 세계 에너지 시스템은 약 50년 만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제한이 완화되고 경제 활동이 회복되면서 에너지 수요와 소비가 급증함.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에너지 공급 부족 및 가격 인상이 발생함.
 -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에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 시급함.

■ 2021년 1차 에너지 소비 코로나 이전 수준 능가, 에너지 가격 증가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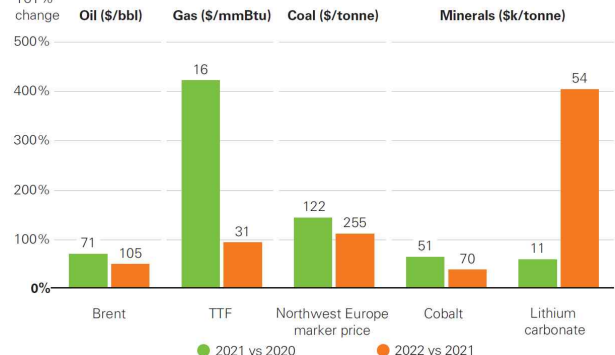
- 2021년 1차 에너지 소비량은 전년 대비 급격히 반등하여 약 6% 증가하였고, 2019년보다는 1% 이상 높은 것으로 추정됨.
 - 2021년 1차 에너지 소비량은 전년 대비 31EJ 증가하여 역사상 가장 급격한 증가를 기록함. 이는 2019과 비교하면 8EJ 증가한 것임. 2020년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했었음(<그림 1> 참조).
 - 석유 소비는 감소(-8EJ)하였으나 천연가스(5EJ) 및 석탄(3EJ)의 소비 증가로 상쇄됨.
- 2021년 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였는데, 특히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오름.
 - 네덜란드 TTF 가스 가격은 2021년 평균 \$16/mmBtu로 2020년 대비 400% 이상 증가함(<그림 2> 참조).
 - 유가는 전년 대비 약 70% 상승했으며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0 정도임.
 - 에너지 가격 상승은 2022년에도 이어지고 있음. 특히 탄산리튬 가격은 2022년 상반기 5개월 동안 400% 이상 급등하여 톤당 \$54,000를 기록함.

5) 본고는 6월 28일에 발표된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2, 71st edition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함.

〈그림 1〉 1차 에너지 소비 변화



〈그림 2〉 에너지 가격 변화



자료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2, 71st edition.

이산화탄소 배출량 2019년 수준으로 반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상승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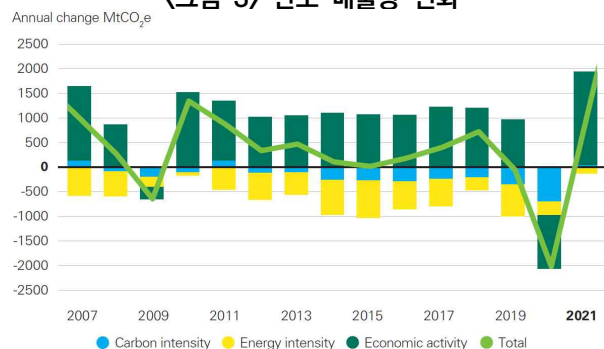
● 2021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9년 수준 이상으로 크게 반등함.

- 2020년 코로나의 영향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활동 제약 등이 완화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함(〈그림 3〉 참조).
- 탄소 집약도와 에너지 집약도는 2021년에 전년 대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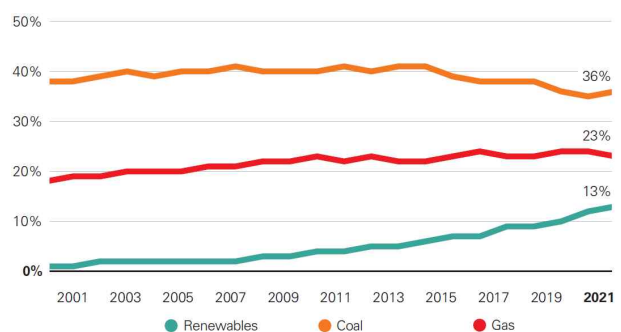
● 전 세계 발전에서 재생에너지(수력 제외) 활용 비중은 상승세를 지속함.

- 2021년 발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로 원자력(9.8%)보다 높음. 태양열 및 풍력 에너지의 확장에 힘입어 상승세를 지속함(〈그림 4〉 참조).
- 석탄을 활용한 발전 비중은 2020년 35%에서 2021년 36%로 약간 증가했지만 2019년보다는 낮은 비중을 보임.

〈그림 3〉 탄소 배출량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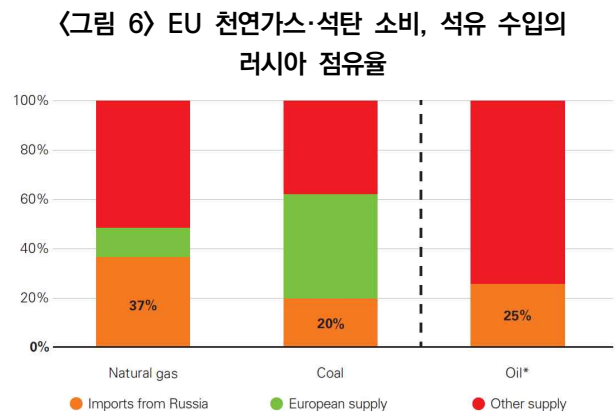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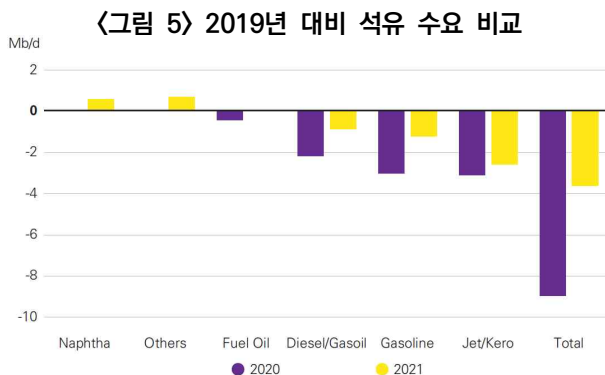
〈그림 4〉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자료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2, 71st edition.

■ 항공 관련 석유 수요 감소 지속, EU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높은 상황

- 2021년 석유 수요는 항공기 운항 감소로 인해 2019년보다 낮은 수준을 보임.
 - 코로나로 인해 감소했던 항공기 운항이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함에 따라 2021년 항공 관련 석유 수요가 2019년보다 2.5Mb/d(33%) 이상 낮아짐. 이러한 영향으로 2021년 전체 석유 수요도 2019년보다 낮은 평균 3.7Mb/d를 기록함(<그림 5> 참조).
 - 2021년 디젤 및 경유 수요는 2019년보다 1Mb/d(3%) 낮았지만, 나프타 및 기타 석유 제품 수요는 2019년보다 높음.
- 2021년 EU의 천연 가스 소비의 37%는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음.
 - 2021년 EU 석탄 에너지 소비에서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임(<그림 6> 참조).
 - 러시아 석유 수입은 전체 EU 석유 수입의 25%를 차지하고 있음.



자료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2, 71st edition.

이지혜(부연구위원 · jihyelee@cerik.re.kr)

지난 10년간 가장 저조... 韓, 인프라 지원 실적 3.2억 달러

-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국 실적 중 4.3%에 불과, 2020년은 전년 대비 80% 감소 -

연평균 223억 달러 지원. '교통 및 물류, 에너지' 2개 분야의 투자 비중 75% 차지

- 지난 10년간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가입국의 인프라 관련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실적을 살펴보면, 2015년 262억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2020년에는 전년 대비 6.6% 감소한 220억 달러를 기록함.
- 인프라 관련 분야별 누적 지원액을 살펴보면, '교통 및 물류' 분야가 927억 달러(41.5%)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에너지(750억 달러, 33.5%), 식수공급 및 위생(523억 달러, 23.4%), 통신(35억 달러, 1.6%) 순으로 나타남. 특히, '교통 및 물류, 에너지' 2개 분야의 비중은 75%를 차지함.

<표 1> 지난 10년간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국의 인프라 분야별 지원현황(약정액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식수공급 및 위생	4,484.31	6,203.96	5,330.88	4,317.12	5,605.50	4,766.53	5,609.41	5,057.47	5,381.47	5,514.50
교통 및 물류	5,271.43	7,318.88	9,076.11	7,932.65	9,951.70	11,571.17	11,168.84	11,446.65	7,821.76	11,170.53
통신	306.27	438.02	301.43	349.39	361.76	245.44	181.79	335.37	676.61	320.50
에너지	5,804.36	5,417.97	7,193.22	8,517.30	10,256.56	7,969.90	7,943.13	7,095.51	9,715.04	5,037.07
합 계	15,866.37	19,378.83	21,901.64	21,116.46	26,175.52	24,553.04	24,903.17	23,935.00	23,594.88	22,042.60

자료 : OECD Statistics, Aid (ODA) by sector and donor [DAC5], (검색일자 : 2022.8.19).

전체 가입국 지원 실적 중 4.3% 차지, 2020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3.2억 달러 기록

- 우리나라의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2019년 15억 달러로 가장 많은 지원을 하였으나 2020년에는 전년 대비 80% 감소한 3.2억 달러로 지난 10년간 가장 저조한 지원 실적을 기록함.
- 분야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교통 및 물류' 분야 지원액이 50억 달러(52.1%)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식수공급 및 위생(19억 달러, 20.3%)', '에너지(16억 달러, 16.8%)', '통신(10억 달러, 10.8%)' 순으로 나타남.
- 특히, '교통 및 물류, 식수공급 및 위생' 2개 분야의 비중은 72%를 차지하는데 이는 중점협력국(27개국)⁶⁾별 중점협력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 정책 추진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6) 관계부처 합동(2021.1.20.), "ODA 중점협력국 재선정", 우리나라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효과를 제고 하기 위해 양자 ODA 예산의 70% 지원을 목표로 중점협력국을 지정 및 운영함.

- 중점협력국의 인프라 관련 중점협력 분야를 살펴보면, ‘교통 및 물류(20개국)’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물관리 및 보건위생(16개국), 에너지(10개국), 통신(4개국)’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2>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인프라 분야별 지원현황(약정액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식수공급 및 위생	172.13	187.39	365.25	225.35	251.86	269.42	76.14	38.50	319.90	41.54
교통 및 물류	315.40	324.78	311.57	771.30	600.89	665.90	831.38	444.79	593.01	131.50
통신	73.22	103.51	87.14	25.00	46.62	107.20	17.18	220.88	315.92	38.14
에너지	206.12	56.85	159.82	8.84	97.96	88.31	114.91	469.34	297.11	105.43
합 계	766.87	672.53	923.78	1,030.49	997.33	1,130.83	1,039.61	1,173.51	1,525.94	316.61

자료 : OECD Statistics, Aid (ODA) by sector and donor [DAC5], (검색일자 : 2022.8.19).

-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국의 인프라 관련 누적 지원액(2,235억 달러) 중 우리나라(96억 달러)는 4.3%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 10년간 연도별 비중을 살펴보면, 2017년 4.2%를 기점으로 지속해서 증가하여 2019년 6.5%로 2.3%p 증가하였으나 2020년 전년 대비 5.1%p 감소한 1.4%로 가장 낮은 비중을 기록함.

일본은 지난 10년간 1,036억 달러 지원, 인프라 관련 ODA 사업에서 영향력 매우 커

- 주요 해외건설 수주 경쟁국인 일본의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2018년 121억 달러로 가장 많은 지원액을 기록하였으며 2020년 전년 대비 40% 증가한 115억 달러를 기록함.
 - 누적 지원액을 기준으로 분야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교통 및 물류’ 분야가 657억 달러(63.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에너지(225억 달러, 21.7%)’, ‘식수공급 및 위생(147억 달러, 14.7%)’, ‘통신(7.6억 달러, 0.7%)’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 비중이 60%를 상회 함.

<표 3> 지난 10년간 일본의 인프라 분야별 지원현황(약정액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식수공급 및 위생	1,711.38	2,140.23	1,614.93	765.05	1,747.21	1,327.32	1,481.87	1,134.53	589.27	2,169.50
교통 및 물류	3,679.31	5,586.95	6,688.84	4,794.14	6,405.91	8,027.04	7,751.02	9,589.42	4,383.14	8,770.80
통신	36.65	225.36	40.12	165.56	116.37	56.88	42.82	18.96	29.90	25.14
에너지	2,707.03	1,169.84	2,153.84	2,945.05	3,764.81	2,609.30	2,046.45	1,365.75	3,205.49	515.22
합 계	8,134.37	9,122.38	10,497.73	8,669.80	12,034.30	12,020.54	11,322.16	12,108.66	8,207.80	11,480.66

자료 : OECD Statistics, Aid (ODA) by sector and donor [DAC5], (검색일자 : 2022.8.19).

-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국의 인프라 관련 누적 지원액 중 일본의 비중은 46.4%(1,036억 달러)를 차지함에 따라 전 세계 공적개발원조(ODA) 시장에서 높은 영향력을 보이며 이를 기반으로 자국 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 및 진출을 지원하고 있음.
- 지난 10년간 일본의 인프라 관련 지원액의 연평균 증가율(CAGR)은 3.9%로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국의 지원액 증가율(3.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일본의 영향력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특히, 인프라 분야별 전체 누적 지원액 중 일본의 지원 비중을 살펴보면, ‘교통 및 물류’는 70.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에너지(30.0%), 수자원 및 위생(28.1%), 통신(21.5%)’ 순으로 나타남.

■ 민간 재원을 활용한 개도국 인프라 시설 지원과 중장기적으로 지원 규모 확대 모색 필요

- 지난 10년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국은 인프라 관련 사업에 총 2,235억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41.5%)’ 분야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20년 인프라 관련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규모는 220억 달러로 우리나라는 1.4%의 비중(3.2억 달러)을 차지하였으며 일본은 52.1%(115억 달러)로 전체 지원액 중 50%를 상회 함.
- 지난 6월 정부⁷⁾는 개도국 인프라 개발 수요를 고려한 대형사업 확대 발굴과 혼합금융(EDCF와 경협증진자금⁸⁾ 연계 등)을 통한 대형인프라 개발 지원 촉진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향후 인프라 분야 지원 규모는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개도국 인프라 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규모 확대 정책 추진에 따라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기반 마련과 함께, 전 세계 공적개발원조(ODA)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은 커질 것으로 예상됨.

김화량(부연구위원 · hrkim@cerik.re.kr)

7)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2. 6. 30.),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안)”

8) 경협증진자금(EDPF, Economic Development Promotion Facility)이란 “개발도상국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한국과의 경제교류 증진을 촉진하는 현지 주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새로 만들어진 금융수단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이 금융시장에서 차입한 자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되, 개발도상국의 대형 인프라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저금리, 중장기 조건으로 제공되는 비구속성 양허성 자금”을 의미함. (기획재정부 생생한 경제이야기, <https://blog.naver.com/mosfnet/222585969572>)

조그라든 K건설 '원 팀'만이 살길

지난 2010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우리 해외 건설은 716억 달러라는 전무후무한 실적을 기록했다. 이후 2014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653억 달러라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2016년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해외 건설 수주는 연평균 300억 달러 안팎의 수준으로 급감했다.

주요 원인으로 국제유가 급락 등과 같은 시장 환경 요인과 기업 수주 전략의 변화를 지적하지만 이것이 현재의 수주 부진을 모두 설명하지 못한다. 여전히 '중동·플랜트'라는 특정 시장과 상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고부가 가치 사업보다는 저가 수주 위주의 단순 도급형 사업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시장 환경은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크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정부는 연간 500억 달러라는 수주 목표와 함께 명확한 지원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민간과 공공 그리고 정부가 하나가 되는 '팀 코리아' 진출 확대와 정부 간(G2G) 협력 강화다. 해외 건설 시장 수주 경쟁력은 개별 기업의 사업 역량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건설 외교를 비롯한 국가 차원의 역량 활용이 필수적이다.

다음으로는 금융과 정보 제공 고도화를 위한 민간 기업의 역량 강화 지원이다. 정부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정책 펀드 등을 통해 세계 인프라 사업 투자를 확대하고 심층적인 정보 제공과 투자개발사업 수주 확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에서 활용 가능한 수주 기회 요인은 무엇일까.

세계 경제를 위기로 몰고 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전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최대 5000억 유로(675조원),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유럽 연합(EU)은 우크라이나 중장기 재건 계획인 '리빌드 우크라이나'를 발표하며 앞으로 재건 사업 추진 과정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재건에 필요한 비용 조달과 사업의 결정 등에 있어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우리 기업이 참여할 기회는 충분하다. 잠재된 기회를 사업 수주라는 구체적인 성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 중심의 전략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중심의 중동 수주 확대다. 사우디는 친환경 미래도시인 '네옌시티'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소 5000억 달러, 최대 1조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메가 프로젝트로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석유 의존적인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기술 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비전 아래 추진하는 만큼 산업단지와 관광단지 조성에 대규모 토목·건축 사업이 필요하다. 최근 몇 년의 수주 부진을 가리키면서 더는 경쟁력이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지금의 부진은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다. 관건은 정부, 민간 기업, 공공 기관이 '원 팀'으로서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지원할 수 있는가다. '한국 건설의 야성'을 일깨우지 못한다면 해외 시장에서 국내 건설사가 설 자리는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 <이데일리, 8.15>

손태홍(연구위원 · thsohn@cerik.re.kr)